

1. 농림부의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중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조항 없어...한농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

-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린 농림부 주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워크숍'에서, 농림부는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해 농업정책 대상자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 변경할 계획임을 밝혔다.
-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에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런데, 농림부는 현행법 제12조에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전업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육성 조항을 삭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물론 농림부는 이를 대신하여 (가칭) '농업경영체육성법'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나, 기존의 후계농업경영인과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농업경영체 육성을 거론하면서, 정작 경영체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후계농업인력 육성정책은 전무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 이에 학계 및 전문가들조차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농업인의 정의가 애매모호하며, 특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우리 농업을 주도해 나갈 주노동력을 어떻게 육성하고 확보해나갈 것인지 방안이 미흡해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앞으로 한농연은 '농업농촌기본법' 개정과 '농업경영체육성법' 제정과 관련, 현행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1항과 2항에 있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지원정책 관련 내용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법률안 개정을 반드시 관철시킬 방침이다. 특히 농민단체가 운영하는 농업인교육센터 설치·운영 지원 문제와, 후계농업경영인 등 선도농업인 우대보증 확대·부분보증 폐지 등의 정책도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작업과 병행하여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2. 8월 9일 미국산 쇠고기 본격 시판...적극 대응 요구

- 롯데마트의 7월 13~15일간 미국산 쇠고기 매출액은 4억 5천만 원, 판매량은 20t에 달했다. 롯데마트가 척아이롤(알목심살)을 윗등심으로 둔갑 판매하고, 삼성 홈플러스 매장에서 1cm, 7mm 짜리 뼈 의심물질이 발견되는 등 파문이 일었다. 급기야 7월 29일 미국 카길사가 수출한 소 목심 18t의 미국산 쇠고기 중에서 살코기와 함께 포장된 소의 척추가 발견되었다. 이에 농림부는 우선 1일 오전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작업을 중단했다.
- 그럼에도 6월 이후 미국산 쇠고기는 1,200t 이상 수입되면서 우리 식탁을 빠르게 잠식하며 국산 돈육, 계육 등의 판매는 침체에 빠졌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값이 한우의 절반 이하, 호주산 쇠고기보다도

15~25% 싸기 때문이기도 하다. 7월 16일 농림부 발표에 의하면, 미국산 쇠고기는 2007년 4월말 수입 개 개 이후 현재까지 118건, 1,497t이 수입됐다.

-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명백한 금지 품목인 척추뼈가 든 쇠고기가 발견되었음에도 농림부는 현행 법령 및 미국과의 합의사항에도 없는 '검역 중단'의 조치로만 일관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전면 수입금지'를 선언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등 당면 현안의 '원만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춘 소극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농민단체와 검역·환경단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 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정을 받았지만, 광우병 소를 검증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은 열악한 미국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정부는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빠르면 추석 직전으로 전망되는 '뼈 있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줄속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한농연 및 농민·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대응 활동이 필요하다.

3. 녹록하게 봤다가는 낭패보게 될 한-EU FTA 2차 협상

-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한국은 공산품은 100% 개방하지만 농산물 중 쌀 등 150개 이상을 개방에서 제외한다는 양허안을 EU에 통보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공산품과 농수산물 등 모든 상품 시장을 100% 열겠다는 양허(개방)안을 한국에 전달했다. 당초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EU는 농산물을 포함한 전면 개방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 EU 집행위원회는, 17일 "관세 철폐 못지 않게 비관세장벽 제거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EU는, 한국에 전면 개방을 압박하면서 서비스·투자 협상과 비관세장벽 제거 등 실익 확보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 가운데 한-EU FTA 협상의 줄속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11.2%로, 유럽연합의 4.2%보다 훨씬 높다. 게다가 유럽연합은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면에서도 우리를 훨씬 앞선다. 고품질 농산물 및 와인·축산·낙농품 등 가공식품류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그나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자동차·전기전자·섬유·운송기계 정도지만, 수출 증가 못지 않게 고가 수입차들이 밀려들 것을 고려하면 득실 계산이 쉽지 않다.
- EU의 안대로 개방이 이뤄진다면 한-미 FTA보다 훨씬 빠르고 폭넓은 개방이 이뤄질 것이다. 그런데도 협정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영양평가나 충분한 공론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한-미 FTA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줄속 협상인 한-EU FTA에 대한 농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